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7월 대고비'

누적 확진 광주 3000명 육박... 전남 1600여명 수도권 대유행 속 방학철·휴가철 교류 잦아 백신 부족으로 접종자수 '뚝'...면역 사각 우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상황이 '7월 대고비'를 맞고 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백신 수급난과 인도 델타 바이러스에 방학·휴가철까지 겹쳐 3중, 4중 약제가 되고 있다. 방역기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기 부족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7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광주 2974명, 전남 1684명으로 합쳐서 4658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41명에 달한다.

한동안 한자릿수 확진을 이어오다

광주는 열흘 만에, 전남은 12일 만에 두 자릿수 확진을 기록했다. 대부분 산발적 감염이고 격리중 확진 사례지만 방역당국은 어느 때보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안정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7월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수도권이 문제다. 전남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4차 대유행의 싹을 틔우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만 1000명을 넘어섰고 양성률도 4%에 육박하고 있다.

방학은 맞은 대학생과 해외 유학생

들이 속속 귀가(국)하면서 외부 유입에 따른 확진이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오는 9일 10곳을 시작으로 모두 56개의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다음달 29일까지 운영되면서 외부 유입에 대한 불안과 방역당국의 긴장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지역간, 가족간 교류가 많은 휴가철에는 한순간 방심이 모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기 부족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해수욕장 운영 예산의 30%인 14억 원을 방역 비용으로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용객과 업주들의 협조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방역망은 속절없이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폭발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인도발(發) 변이(인델타 바이러스)도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는 12명이나 발생했다. 합계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도 3명이나 나왔다. 영국발 변이까지 합치면 5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백신 접종은 수급불안정으로 순탄치 않다. 1차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숨통이 막힌 형국이다.

한때 2만~3만 명에 이르던 일일 접종자는 이달 들어 하루 1000명 안팎으로 폭 떨어졌다. 광주에서만 10만 8800명이 대상인 55~59세 장년층 1차 접종도 예약기간을 거쳐 오는 26일해야 시작되고, 50~54세는 8월 중 하순에 가능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과 돌봄인력은 7월28일부터, 대입 수험생은 8월 중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1차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광주지역 접종률도 순증없이 7월 내내 3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20~30대 젊은층과 40~50대 장년층이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라는 점과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8인 이하 모임도 가능하고, 영업 금지도 대부분 풀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긴장감이 풀려서 확진세가 심상치 않다"며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정됐다고 보고 외지에서 찾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놀 때도, 야외활동을 할 때도 늘 마스크 착용을 잊지말아야 한다"며 "시민들과 업주들의 자율방역과 위반 시 일벌백계하는 원칙이 병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신미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끝없는 대기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6개월 만에 1000명대를 돌파한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유령직원, 사립고 행정실 10년째 근무

광주시교육청, 해당 학교 감사 요청

광주의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 10년 간 '유령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 광주시교육청에서 급여를 탈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유령직원으로 의심되는 A씨는 행정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A씨의 재직기간과 직급·호봉을 고려했을 때 유령직원이 확실하다면 월령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해당 직원의 정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주 이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무작위로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A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인사기록카드, 문서생산물, 직원일람표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고등학교를 즉각 감사하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 책임자를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슬비기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가부에 3개월 내 즉시 통보

위계 성폭력, 피해자 명시적 반대 없을때 신고 안 하면 처벌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기관 내에서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된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안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차관은 피해자가 다수인 기준에 대해 "1인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다수라고 보고 있다"라며 "사건의 내용,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3개월 내에 사건 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김 차관은 "과거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없었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에는 3개월 이내로 명시해서 해서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정부는 모든 면에서 항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공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를 통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가부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장 사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 처리 및 필요한 조치 사항을 요청한다.

수사기관 신고도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차관은 명시적 반대 개념에 대해 "특별한 형식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반대사실을 의미한다"라며 "이게 필요한 건 제3자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관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이익은 인사 조치 외에 집단적 따돌림,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신체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이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들이 해당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